

# 보건의료노조

## '99년 상반기 투쟁

강영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

많은 사업장이 교섭을  
진행하거나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해서  
보건의료노조 상반기 투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지금까지의 보건의료노조  
투쟁의 준비과정과 투쟁경과를  
간략히 개괄하고, 주요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글은 보건의료노조 중앙간부  
한사람의 의견일 뿐  
보건의료노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덧붙인다.

### 1. 보건의료노조의 '99 투쟁 준비

1999. 7. 1 현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의 교섭진행 상황을 보면, 산하 임금단체협약 갱신교섭 대상 총 132개 사업장 중 80여개 사업장이 타결되어 약 60%정도의 타결율을 보이고 있다.

'98년 상반기부터 병원산업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밀어닥쳤다. 국가보훈처 산하 기관인 한국보훈병원이 국가보훈처 지침에 의거하여 영양실 등 일부 직종을 용역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던 것이 하반기에는 기획예산위 지침으로 공기업 전체로 구조조정이 확산되었다. 보건의료노조가 포괄하고 있는 공공병원 조직은 원자력병원지부, 한국보훈병원본부, 국립대병원 7개 지부, 지방공사의료원 27개 지부 등 총 38개 지부 약 1만 1천 여명 정도가 된다. 연말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단지 공공병원만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병원, 특히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중소병원으로 확산되어, 구조조정을 빌미로 정리하고 통보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한 '98년 하반기 투쟁은 보건의료노조 수준

에서는 전국적 투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조합원들 사이에 이를 받아들이는 위기감의 차이와 투쟁동력의 분리가 확연히 드러났고, 공공병원의 대정부 투쟁 또한 해당 부처를 상대로 집회 투쟁을 전개하는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한 결과 몇몇 지부가 해당 부처를 상대로 각개전투하는 꼴이었고, 전체투쟁으로 상승·발전되지 못하였다.

'99년 투쟁은 '98년 하반기 구조조정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선 구조조정 사업장 투쟁과 입단투 사업장 투쟁이 분리를 막고, 하나의 전선으로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되었다. 아울러 총 노동차원의 전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절박하게 요구되었다. 여차피 구조조정이 총자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를 한두개의 연맹 차원의 전선으로 돌파할 수 없고, 민주노총 차원의 전선 구축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99년 상반기 투쟁을 준비하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전체 요구로 다음의 6대 요구를 채택하였다.

- 생존권 위협하는 구조조정 중단
- 국민건강 지켜내는 병원인력 확보

- 돈벌이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병원경영 및 의료제도 개혁
-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사업주 처벌
-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용보장
-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한 사회개혁 및 재벌·정치체제 개혁.

대부분 지부에서는 이러한 6대 요구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적인 요구들을 내걸었는데, 주요핵심요구는 '병원기본인력 확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교섭대상으로는 개별사용자를 상대로 한 대각선 교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병협)를 상대로한 중앙교섭과 대정부 투쟁, 그리고 구조조정 사업장의 해당부처를 상대로한 대정부 투쟁을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2월에 들어서면서 공공 3조직,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3~4월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는 제안과 더불어 이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정리해고중단·노동시간단축·사회안전망구축·산별교섭쟁취라는 4대요구를 내걸고 대정부투쟁을 진행하기로 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당시 보건의료노조의 주된 고민은 무엇보다도, 준비정도를 볼 때 과연 3~4월 총파업투쟁에 보건의료노조가 전면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조직집점 결과

파업투쟁에 나설 수 있는 조직은 기껏해야 구조조정 사업장 3~4개 지부 정도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민간병원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공공병원도 다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애초 보건의료노조는 구조조정 투쟁, 임단투를 분리하지 않고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함께 모아서 투쟁하며, 투쟁시기에서도 5~6월 정도(확정하지는 않았지만)로 상정하고 있었다. 고민 끝에 보건의료노조는 3~4월 투쟁에 최대한 결합하는 것으로 하되, 파업이 불가능한 조직은 연월차를 내고 집회투쟁이라도 조직하기로 하는 정도로 잠정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임단투에 관한 세부 논의는 3~4월 투쟁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보건의료노조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점이 3월 9일~10일 소집된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이하 대표자수련회)를 통해 공식 확인되었다. 대표자수련회에서 공공 3조직을 제외한 다른 연맹들은 대부분 3~4월 총파업투쟁 조직에 대해 대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대표자련회 직후 소집된 제2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반영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민주노총 대표자수련회 분임토의 직후 열린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총력투쟁시기를 5월 10일 주로 잡고, 이를 민주노총 지도부와

전체 토론에서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보건의료노조가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투쟁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는 토론 끝에 도달한 결론이었다. 이 결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3~4월 대정부투쟁과 뒤이은 임단투 투쟁이라는, 요컨대 2단계 투쟁은 1단계 투쟁(임단투와 대정부 투쟁의 결합)으로 정리될 수 있는 조건을 맞게 되었다.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에서 나온 각 조직의 의견을 종합할 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시기는 4월말 5월초경으로 설정하고, 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배치하는 총력투쟁을 4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5월 1일 노동절투쟁으로 연결시켜 낸다. 서울지하철등 3월말 4월초에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은 최대한 민주노총 총력투쟁일정에 맞추되, 여의치 않은 경우 해당연맹과 협의하여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1999년 제2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이날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통합공공연맹과 다른 연맹들간에 투쟁시기가 완전히 일치된 것은 아니었다. 각 조직의 상황에 대한 연맹간 공유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4월말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언제로 일정을 확정할 것인지도 논의되어야 했다. 투쟁시기를 조정하려는 노력은 제3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원회(3월 31일)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4월 19일 돌입하는 통합공공연맹의 투쟁시기와 5월 12일부터 돌입하는 금속산업연맹 및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시기 간의 간극은 더 좁히지 못한채 민주노총 1차투쟁(4월투쟁)·2차투쟁(5월투쟁)은 시기적으로 분리된다.

## 2. 보건의료노조 투쟁의 진행경과

### 동시집중파업전술의 구사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총력투쟁에 대한 준비를 진행시켰다. 4월 21일 소집된 중

집, 투쟁사업장 지부상 연석회의는 5월 12일부터 시작하는 파업일정을 지부별로 최종 확정지었다. 이 회의는 5월 12일~20일 사이에 투쟁사업장을 동시파업형태로 집중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파업은 최소 1주일 이상을 이어나간다는 각오로 준비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공공병원, 민간병원 중 조직력이 있는 선두에 세워 돌파하는 이 파업은 총 34개 사업장 12,243명이 참여하는 투쟁으로서 조직될 예정이었다. 동시파업 전술배치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 이번 투쟁이 대정부 투쟁의 성격은

대중 보건의료노조는 구조조정 투쟁, 일당투를 분리하지 않고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함께 모아서 투쟁하며, 투쟁시기에서도 5~6월 정도(확정하지는 않았지만)로 상임하고 있었다. 사진은 일방적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병원노동자들.



갖는 이상 지부별 개별투쟁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 따라서 대정부투쟁을 최고수위로 끌어올리고 정부의 결단을 압박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시파업전술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각 지부의 조직편차 등을 감안하였을 때 같은 날 동시에 일제히 들어가기 보다는 선봉대위를 앞세워 파업을 배치하되 상대적으로 약한 조직이 뒤따라 붙으면서 투쟁을 확산·고양시키는 형국으로 전술을 배치할 때 승리의 전망을 가질 수 있다.

● 아울러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의 완강성과 규모에 따라 일정한 신축성을 갖고 파업의 완급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감안되었다.

파업투쟁의 최종점점을 위해 소집된 제112차 중앙집행위원회(5월 6일)는 정세의 유동성에 따른 몇가지 파업투쟁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금속산업연맹이 구조조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약 5만명 정도의 파업을 진행하면서 2박3일 1만명 정도의 상경투쟁을 예정하고 있고, 공공연맹이 5월 14일부터 3차총파업을 예정(서울 지하철 2차파업)하고 있는 상황 등이 점진되었다. 문제는 주말인 5월 15일 이후 타 연맹 차원의 투쟁이 지속되거나 파고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최종점검하면서 병원노련 지도부는 주말을 전후로 하여 일정한 국면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상황을 공유하였다. 지속적으로 파업의 파고만 높여낼 때 뒤에 따라붙는 아군이 없으므로 인해 정부와 자본측으로부터 포위, 고립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었다. 물론 이는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도 투쟁이 최고조에 이를 시점이 5월 13일~14일이므로, 이때부터 타결을 시도해 들어가는 것이 힘의 본배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 파업투쟁의 진행과 타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5월 12일부터 시작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투쟁은 금속산업연맹의 투쟁과 함께 민주노총 제2차 총력투쟁의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원자력병원, 한국보훈병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경희대의료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과 민간이 결합된 선두대오가 파업투쟁을 치고 나가면서 다소 조직력이 약한 지부가 이를 뒤따라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 짧은 파업이긴 하였으나 1999. 7. 1일 현재 24개 사업장 10,530명의 조합원들이 연속적으로 파업투쟁에 참여하였고, 그 성과로 단체협약 차원이기는 하지만 정부, 사용자들의 구조조정을 일정정도 저지시킬 수 있었다. 물론 원자력병원처럼 사용자들이 버티는 경우는 장기파업(16일)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99년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와 사업장 수

로 볼 때에는 병원노련 11년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투쟁이었다. (투쟁의 파급력이나 집중력을 떠나 참여한 조직의 규모만으로 볼 때는 '96/97년 진행된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당시보다도 크다.)

타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검토해 보면 총자본이 밀어부치는 공공병원의 구조조정 방침을 단체협약 수준에서는 나름대로 저지해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사용자가 밀어부쳤던 인력감축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쟁취하여 이를 반전시켰다. 아울러 자연감원되고 있던 인력을 증원토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낸 사업장도 꽤 있었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토록 하는 협약도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쟁취하였다. 나아가 연봉제 도

입시 노사합의 수준을 쟁취한 곳도 상당수였다. 임금이 인상된 사업장은 80개 사업장 중 59개 사업장이었고 대체로 2~3%(총액대비)가 다수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모두 임금이 동결되었고 임금이 반납되거나 삭감된 사업장은 전혀 없었다. 기타 경영참가 사항에서는 인사승진 및 평가제도개선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 의료비리 온상이 되는 의약품위원회 및 의료장비구입위원회 참여를 많은 지부가 쟁취하였다. 또한 산별노조의 정책적 요구인 최저임금에 대해서 19개 지부가 요구하여 5개 지부가 단체협약에 최저임금 기준을 명시하였다. 이는 산별적 요구이기도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월 12일부터 시작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투쟁은 금속산업연맹의 투쟁과 함께 민주노총 제2차 총력투쟁의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 3. '99 투쟁 평가에 대신하여 -특징과 한계

#### 임단투와 결합된 대정부투쟁

임단투와 결합된 대정부 투쟁이라는 성격규정은 다소 모호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총자본의 전략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임은 분명히 하되, 민주노총 4대 요구를 내건 대정부 투쟁 뿐만 아니라 개별자본을 상대로 임단협이라는 매개고리를 통해서도 이를 동시에 저지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총 전선에서 밀린다하여 현장 조합원들마저 완전한 무장해제 상태로 자본의 처분에 내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것은 사실 총자본을 상대로 한 총노동 차원의 일대 반격이 과연 가능할 만큼 우리의 힘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나름

투쟁의 진행과정에서 총노동 차원의 총파업전선은 구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목표설정이 과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투쟁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었는가? 이제 우리 노동 조합운동은 이러한 점에서부터 냉정한 점검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의 정세판단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총노동과 총자본간의 대결에서 일정한 반격이 가능할 정도의 힘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또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공세가 가능한 정세라 한다면 전술은 적극적이고 과감히 운용되는 것이 옳다. 이럴 경우 개별 사업장 단위로 타결하면서 전선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총자본과의 요구를 중심으로 강력한 전선을 구축하는데 전술운용의 우위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반대일 경우, 요컨대 방어를 우위에 두어야 하는 정세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체전선을 강력히 구축하면서 정세의 반전을 꾀하는 동시에, 조직적 퇴각에 대비한 전술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99년 상반기 총노동과 총자본과의 협관계(정세)를 타산해 보았을 때, 특히 4월 당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우리의 준비 정도를 감안하건대 후자의 상황이었다는 데에는 크게 이의가 없을 것이라 본다. 조직적 퇴각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투쟁과 임단투를 결합시킬 수밖에 없었다. 대정부투쟁 전선의 파고가 커질 경우는 민주노총 지침, 보건의료노조의 지침으로 임단협 타결없이 대정부투쟁을 밀어부치면 될 수 있다

타결 사업장	총 80개(1999. 7. 1.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보	20개 사업장
비정규직 도입금지	14개 사업장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	16개 사업장
연봉제 도입시 노사합의 수준	19개 사업장
임금인상	59개 사업장

는 판단이었고, 만일 퇴각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최소한 단체협약 수준에서라도 일단의 방어선을 구축해 놓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의 4대요구를 중심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조직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그나마 넓은 범위에서 조합원들을 투쟁에 동참시키기 방법으로 입단협과 대정부투쟁의 결합이라는 방침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자.

물론 보건의료노조가 택한 입단투와 대정부투쟁의 결합이라는 방침이 최선의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지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짧은 순간을 놓고 볼 때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어 보이는 투쟁도, 긴 호흡 속에서 볼 때는 운동의 질적인 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고, 또 그 반대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 '99투쟁의 한계

보건의료노조의 '99투쟁은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도록 강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교섭(대정부교섭) 조차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총자본의 구조조정 정책을 사업장 단체협약 수준에서 일정한

도 저지시켰을 뿐이었다. 이것은 보건의료노조의 한계였고, '99년 총노동이 보여준 힘의 한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반성적으로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있다. 올 상반기 투쟁에서 투쟁의 성격 내지는 기조와 실제 진행된 투쟁의 양상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었나 하는 물음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을 올해 투쟁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막상 진행된 투쟁은 몇몇 연맹의 산발적인 내지는 고립된 투쟁이 고작이었다.

이러한 이론(목표)과 현실(실천)간의 분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총자본의 정책기조를 바꾸는 투쟁은 총노동차원의 전선구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투쟁의 진행과정에서 총노동차원의 총파업전선은 구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목표설정이 과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투쟁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었는가? 이제 우리 노동조합운동은 이러한 점에서부터 냉정한 점검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해 대중에 대한 책임을 져 나가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간 투쟁과정에서 나타났던 지도부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